

# 대법원 2024도14456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피고인 1은 2018. 6. 13.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, 2022. 6. 1.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김천시장으로 당선된 사람, 피고인 2는 김천시청 시민소통팀장(비서실장)으로 재직 중인 사람, 피고인 3은 광고대행사 광고국장으로서, ① 피고인 1, 2가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 등 수백 명에게 설 및 추석 명절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천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피고인 1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,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, ② 피고인 2가 김천시청 비서실장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, 피고인 3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

대법원 2부(주심 대법관 권영준)는, **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,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, 피고인 2, 3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**(대법원 2024. 11. 28. 선고 2024도14456 판결)

## 1. 사안의 개요

### 가. 피고인들의 지위

- 피고인 1 ⇒ 2018. 6. 13.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김천시장으로 당선, 2022. 6. 1.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로 출마하여 김천시장으로 당선

■ 피고인 2 ⇒ 김천시청 시민소통팀장(비서실장)

■ 피고인 3 ⇒ 광고대행사 광고국장임

## 나. 공소사실의 요지

### ■ ① 피고인 1, 2의 공직선거법 위반[기부행위제한 위반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]

● 원심 공동피고인 일부와 공모하여, 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를 통하여 피고인 1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,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

■ 2021년 설 무렵 ⇒ 총 176명에게 합계 18,996,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과하주 등 선물 제공

■ 2021년 추석 무렵 ⇒ 총 179명에게 합계 19,264,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과하주 등 선물 제공

●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, 김천시 산하 22개 읍·면·동을 통하여 피고인 1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,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

■ 2021년 설 무렵 ⇒ 총 729명에게 합계 13,874,400원 상당의 설 선물 제공

■ 2021년 추석 무렵 ⇒ 총 750명에게 합계 14,034,000원 상당의 설 선물 제공

### ■ ② 피고인 2, 3의 뇌물수수, 뇌물공여 등

● 주위적 공소사실 ⇒ 피고인 2의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뇌물),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위반 및 피고인 3의 뇌물공여,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위반

- 피고인 2는 김천시청 비서실장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3,300만 원에 상당하는 법률 용역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받음
- 피고인 3은 공무원인 피고인 2의 직무에 관하여 3,300만 원에 상당하는 법률 용역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
-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⇒ 피고인 2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3의 뇌물공여
  - 피고인 2는 김천시청 비서실장의 직무에 관하여 3,300만 원 상당을 차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 기회 및 그에 따른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
  - 피고인 3은 공무원인 피고인 2의 직무에 관하여 3,300만 원 상당을 빌려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 기회 및 그에 따른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함

## 2. 소송경과<sup>1)</sup>

### 가. 제1심

- ▣ 피고인 1 ⇒ 전부 유죄
  -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
- ▣ 피고인 2 ⇒ ① 부분 유죄, ② 부분 무죄
  -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
- ▣ 피고인 3 ⇒ 무죄

---

1) 제1심 피고인은 26명, 원심 피고인은 16명인데,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판결 확정 되었으므로, 상고심에 이심된 피고인에 대한 부분만 기재함

## 나. 원심

▣ 피고인 1 ⇒ 항소기각

▣ 피고인 2 ⇒ ② 중 주위적 공소사실 이유 무죄, 나머지 유죄

-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+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, 추징 126,575 원

▣ 피고인 3 ⇒ ② 중 주위적 공소사실 이유 무죄, ② 중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

- 벌금 200만 원

▣ ① 부분 유죄 판단 근거

-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죄는 구성요건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법조경합 관계가 아닌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, 양 죄가 모두 성립함
-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고, 피고인 1이 이 사건 기부 과정에서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
- 지방자치단체장이 '자기 자신을 위하여'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'공무원'에 해당함
- 피고인 1은 읍·면·동을 통한 기부행위의 주체로서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됨
- 기부행위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피고인 1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'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'에 해당함
- 피고인 1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내지 읍·면·동의 예산집행행위가 아닌 피고인 개인의 기부행위라고 봄이 타당함
- 피고인 1을 다른 공동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은 정당함
- 이 사건 기부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
■ ② 부분 중 유죄 판단 근거

- 피고인 2가 피고인 3으로부터 받은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, 그들에게 뇌물수수 내지 뇌물공여의 고의가 인정됨

■ 피고인들 상고

### 3. 대법원의 판단

#### 가. 쟁점

-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관계
-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
- 피고인 1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인 '공무원'에 해당하는지 여부
- 피고인 1이 '지위를 이용하여' 지역 언론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
- 이 사건 기부행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피고인 1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
- 피고인 1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'정당행위'에 해당하는지 여부
- 피고인 3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

#### 나. 판결 결과

- 피고인들 상고 기각(원심 수긍)

#### 다. 판단 내용

-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
  -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, 죄수관계, 공소시효, 정

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

▣ 피고인 2의 상고에 관하여

- 피고인 2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, 상고장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

▣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

-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